

경제위기, 사회 공공성 그리고 체신노동자

한지원(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)

2012.02.11

1. 경제위기와 공공부문

- 2008년 세계금융위기 쟁점은 국가재정부분으로 이동
 - 미국, 서유럽 대부분 부실 금융 기관 지원으로 정부 부채 급증.
 - 한국 역시 재정 적자 크게 상승. `10년 13조 적자.
 - `11년 반기, 정부 부채 419조, 공기업 353조원. GDP의 70% 규모.
 - 특히 공기업 부채 2008년 대비 60% 가까이 증가.
 - 경제위기에 느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대부분 낭비적 토목에 사용.

- 정부 부채 증가는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력을 약화.
 -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명분.
 - MB 공기업 선진화 방안, 각종 경영혁신 압박 등.
 - 정부 재정의 재벌로의 이전 효과.
 - 재벌들 법인세 인하로 수십조원 혜택. 정부 대규모 토목 공사 수주.
 - 은행, 대기업 건설사들 수십조원의 간접적 지원.

- 2011년 캐나다 우체국 노조의 사례
 - 정부는 경영 혁신 명분으로 연금계약, 신입사원 초임 삭감(기존의 절반)
 - 6월 초부터 순환파업, 15일 직장폐쇄, 28일 종료.
 - 임금 삭감 수준을 조절하는 수준에서 종료.



- 세계경제는 장기 저성장, 국지적 경제위기 계속.
 -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금융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계속.
 - 미국의 약한 회복, 유럽의 강한 침체, 신흥국의 성장 정체.
 - 유럽 재정위기가 대형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경우 제 2 금융위기로 발전도 가능.

- 한국 경제는 재벌 독점 강화되며, 위기 발발 시마다 재벌 중심 위기 대책 계속
 - 2007년 대비 2010년 30대 재벌 순익 8배 증가. 매출 규모 GDP의 95%.
 - 수출의 성장기여도 절대적, 전체 수출 중 30대 재벌 비중 90%.

- 민주당 집권 시에도 공공부분 긴축 기조 계속될 가능성 큼.
 -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제한이 매우 큼. (개방성은 높고, 재벌이 독점하고)
 - 세제개편, 공공지출 개편 등 병행할 것.
 - 노동조합 교섭력이 가장 중요. (교섭력의 핵심은 자주성과 조직력)

2. 한미 FTA 이후 체신 공공성

- 한미 FTA는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의 대결이 아님.
 - 이미 중요한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음.
 - 상품시장 개방 : OECD 가입 조건으로 대부분 개방.(`93~`96)
 - 금융시장 개방 : 98년 외환위기 이후 완전 개방.
 - 한국 제조업의 주요 수출품은 이미 대부분이 현지 생산 체제
 - 해외공장 증설로 삼성전자 휴대폰 80%, TV 100%, 현대차 56% 해외생산.
 - 자동차부품도 대부분 현대차를 통해 나감. 관세인하만큼 납품가 인하됨.

- 핵심은 통상협정을 통해 국내 공공 관련 규제를 손쉽게 철폐하는 것임.
 -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함. 각종 규제를 무역협정을 통해 무력화.
 - 국내 재벌과 미국 초국적기업이 진출한 신규 사업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.
 - 예) 우체국보험과 우체국 택배가 제약되면 가장 좋은 것은 국내재벌.

- 우편법 개정에 따라 미국 및 한국의 택배 서비스 업체가 350그램 이상의 우편물을 취급.
 - 매출 규모는 작지만 수익성은 매우 큰 부분.
 - 350그램 이하 우편물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공익성을 줄일 수 있음.
 - 경쟁 체제 도입 시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우편 서비스 전체의 질 저하.

- 공익 요원 철수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
 -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.

- 공익근무요원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큼.

□ 우편, 택배, 보험 등 우체국 업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

- <우체국 보험법> 개정에 따라 현재 사업 외에 더 상품 개발할 수 없음.
- 택배 역시 영향. 내국민대우 조항으로 외국계 택배업체들이 체소 가능(UPS)
 - 이미 2009년에도 한국 민간 택배 업체들 항의 사례.
- FTA 체결 이후 우체국 소송당한 사례, 2000년 캐나다 우체국.

3.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과 집배노동자

□ 정부가 6월 중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관련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힘.

- 진보진영에서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만 바꾸어도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.
- 노동부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법조항을 바꾸겠다는 입장.
- 정부 의도는 노동시간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고용 지표 개선에 있음.

□ 특례업종으로 되어 있는 우편업은 법 개정 시 특례 폐지.

- 현재는 노사 단협으로 상시집배원 업무만 특례 허용.(기능직, 별정우체국 적용안됨)
-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기능직의 경우 노조 묵인 하에 법 위반 했을 가능성.
- 공무원 관련 지침과 충돌 여부,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기법 적용 사례 검토 필요.

□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

-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가지고 근 10년째 논쟁 중인 현대차의 사례.
 - 물량보전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?
 - 임금보전의 대가는 생산성 향상인가? (즉 일주일 처리량 유지시 임금보전)
 - 노동강도 기준은 무엇인가? (적정한 생산성에 대한 노사 기준 마련 문제)
 - 탄력적근로시간 확대,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자 통제 강화가 필요한가?
- 임금보전, 노동강도유지(완화), 인력 충원, 설비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계획 필요.

□ 주40시간 시행 전 노동조합이 보였던 기만적 합의.

- 2001년 단협개정 시 상시집배원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 인정 합의.
- 기존 단협을 기능직, 별정우체국, 상시집배원으로 나누어 근로시간 차별.
- 만약 단협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특례 법령을 무력화 할 수 있었음.

4. 나가며

- 경제위기 시대,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, 싸울 줄 아는 노동조합이 필요.
 - 한국보다 훨씬 노동친화적인 캐나다도 한 달에 가까운 파업이 필요했음.
 - 체신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감 있게 직시할 필요가 있음.

- 한미FTA 폐기는 체신노동자들의 당면 임무. 체신노동자들이 주도해야 함.
 - 협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된 공공부분은 바로 체신부분.
 - 조항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광범위한 공공성 축소 압력이 계속 행사.

- 체신 민주파의 능력, 민주노조가 만들어 온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계승하는 것에서 찾아야
 - 한국노총은 15년 간 민주노총이 만든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세세한 쟁점을 모름.
 - 임금보존, 임금제도 개편, 노동강도 완화, 노사생산성기준, 인력충원기준 등
 - 공공부분이 앞장 서 노동시간 줄이고,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!